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 사유

-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(2016. 11. 30.)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근거한 법령 조항으로 변경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금고약정서 성립요건 개정 (안 제2조)
 - “기명날인” 을 “서명 또는 기명날인” 으로 변경
- 다.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- 나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
- 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5월 24일 ~ 6월 12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다른 은행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계리 할”을 “회계 처리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명”을 “서명 또는 기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등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(중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등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징 수 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징 수 과 장 류경순
	팀장 직위·성명	세외수입팀장 심광섭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심광섭 (790-518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의 시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재정관리의 안정성,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“금고”라 함은 시의 소관 현금과 시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특별회계”라 함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. 4.·5. (생략) 6. “금고약정”이라 함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다른 은행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회계처리할 ----- -----. 4.·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<u>기명</u>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서명 또는 기명</u>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<신설></p> <p>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등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등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위원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지방회계법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□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"란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

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 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 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 4.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